

李 정부 임기초 ‘삼중특검’ 가동… ‘내란종식’ 속도

취임초반 국정동력 확보 포석
민주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
“정치보복 주장은 적반하장”
국힘 “정쟁 함몰, 성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내란 종식’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자,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선거 기간 내건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지지층에게 정권 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 초반에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미루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훼손된 민주주

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명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 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중 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

李, 11월 경주 APEC 시진핑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받는다

李 대통령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
일주일간 진행…공개검증 등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추천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체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자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체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추천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추천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 시장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공앱 국비 지원 등 촉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 민간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공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 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이 기자

김 지사, 이희호 서거 6주기… ‘국민추천시대’ 다짐

“DJ 민주주의 씨앗 꽃피우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故) 이희호 여사 서거 6주기를 맞아 10일 “여사님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심어준 민주주의의 씨앗을 소중히 가꿔 ‘국민추천시대’를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통해 “한결같은 신념과 사랑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이희호 여사님을 추억하며 온 전남도민과 함께 깊이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998년 2월, 감격 어린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탄생

했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한다”며 “27년이 흐른 2025년 6월, 이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불의와 부조리를 이겨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한 여정이 다시 힘차게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국민추천의 꿈이 이재명 정부를 통해 더욱 빛나는 국민추천시대로 꽃피우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 ‘형사소송법·방송3법’ 쟁점 법안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향후 본회의 일정은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방송3법 등의 처리 여부와 시기는 새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급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

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히려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서울=김선욱 기자